



<b>코스피</b> 2307.07 (+11.81)	<b>코스닥</b> 790.25 (+14.73)
<b>금리</b> (연고채 3년) 2.12 (변동없음)	<b>환율</b> (USD-달러) 1120.60 (+1.90) (1일)



[르포]  
용·여 뜨니 마포 들썩  
'억' 소리나게 오르는 집값  
03

# 밥그릇 뺏길라... 비정규직 차별하는 정규직 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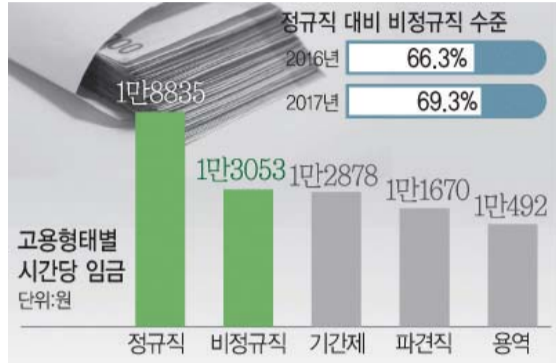
## 실패의 경제 렌트시킹과 집단이기 (12) 勞勞갈등

# "파견계약직이라 9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막막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일 강도는 세서 연장시켜 준다고 해도 같은 월급이라면 거절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곧 삼십대라 빨리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게 일순위입니다." (방송국 파견 계약직 A씨)

# "처음 회사에 들어올 때는 1~2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았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않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계약만료인데 여기서 기문을 두드리고는 있지만 경력이 보잘것 없고 나이도 많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중견기업 계약직 B씨)

우리 사회의 최대 해결 과제로 양극화 현상이 떠오르면서 오로지지만 악순환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및 복지의 차별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규모	임금 (원)	비율 (%)
300인 이상 정규직	3만704원	100%
300인 이상 비정규	1만9996원	65.1
300인 미만 정규	1만6681원	54.3
300인 미만 비정규	1만2380원	40.3

※3만3000개 표본사업체 근로자 약 97만명  
2017년 6월 급여계산기간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뉴시스

###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심화 임금·복지 등 차별 이뤄져

###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기존 정규직원 "처우 나빠져 동일대우는 역차별" 등 불만

결었지만, 정규직의 이기주의의 표출로 연대가 무산되고 노노(勞勞)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오히려 갈등만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 ◆근무는 '한지붕', 임금은 '천차만별'

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경력·자격·근속연수보다는 고용 형태에 따라 이뤄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8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56만5000원으로, 월평균 임금 격차가 9.4%에 달했다.

20대와 여성에 한정하면, 일자리 질 측면에서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20대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31.2%에서 2017년 32.8%로 1.6%포인트 증가했다. 또 여성 임금근로자의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 881만8000명 중 비정규직은 363만2000명(41.2%)으로 남성 비정규직(26.3%)보다 14.9%포인트나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상여금 차이도 크다. 정규직은 64.6%가, 비정규직은 22.5%가 각각 상여금을 받았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안전망인

복지 울타리에서도 한 칸으로 물러나 있다. 2016년 기준 국민연금 적용 비율은 정규직은 82.9%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은 36.5%에 불과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서도 정규직은 약 85~99%로 가입률이 높은 편이지만,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격차가 큰 실정이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노갈등(勞勞) 어찌

이 같은 직장 내 차별에 문재인 정부가 해법으로 내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성과는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6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끊임없는 찬

반 논쟁을 일으키며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노갈등 불씨는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표적 사례다. 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전체 9800여명의 비정규직원 가운데 1100여명을 자회사 1곳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어 나머지 8700여명(3000명은 직접고용 대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노노 갈등이 가시화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자회사 고용 대상 노동자의 전환 채용 등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내용도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면면히 살펴보면 친인척(지인) 채용, 가족채용, 정규직대상자 바뀌치기 등 채용비리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최근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정규직 전환 심사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오히려 동등한 평가가 없는 동일대우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정규직 직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이 늘어

나면 기존 정규직의 처우가 나빠질 수 있고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냐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도 지난달 10일 소송까지 이어지며, 현재진행형이다. 공공기관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채용 축소 우려가 불거진 지도 오래다.

공공기관 입사 준비생 C씨는 "공채를 통과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관련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들인 비용이 상당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채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이후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노노갈등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직 내에서 충돌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규직 전환 방식 등의 논의가 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와 이의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노조는 변화된 환경에 조응하는 전략을 구축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민기자 silkni@metroseoul.co.kr

# 편의점 상비약 운명 'D-6' 약사회-편의점, 대립 심화

## 복지부 상비약심의회 8일 개최

오는 8일 열리는 편의점 안전상비약품 품목 조정 회의를 앞두고, 약사회와 편의점 업계간 '상비약' 논쟁이 정점으로 치닫하고 있다. 거리로 나온 약사회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로 인한 오남용, 부작용 등을 호소하고 있는 한편, 편의점 업계와 시민 단체 등은 약사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정부의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약 33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약사회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로 부작용이 늘고 있어 국민 건강이 위협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집회는 내달 8일 열리는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겨냥해 열렸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로, 이번 회의를 통해 지사제와 제산제 등의 추가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날 집회에서 편의점 의약품 판매로 인한 부작용 증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건강 수호 약사결기대회'에서 조찬회 대한약사회장(왼쪽)을 비롯한 약사회 관계자들이 정부의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 정책과 재벌 친화적 의약품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와 함께 편의점의 약사법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늘리는 대신, 보건소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정부 재원을 활용한 공공 심약국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약사회의 편의점 의약품 판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편의점 협회 측에서도 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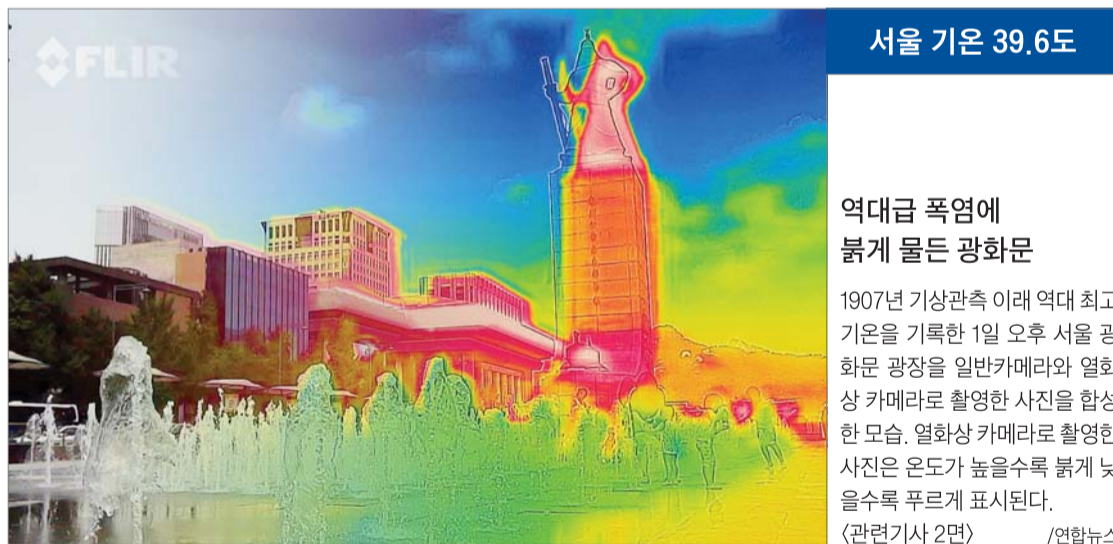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

산업협회는 전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약사회가 국민 건강 수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협회는 약사회가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가짜 뉴스'로 여론을 호도해 소비자들의 불안감마저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를 시작한 2012년 이후, 현재 판매 중인 13개 품목의 의약품 부작용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협회는 최상은 고려대산학협력단 교수의 '안전상비약품 판매제도 시행실태조사 연구'를 토대로 약사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실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점 의약품의 전체 공급량 대비 부작용 발생률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제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타이레놀(500mg)과 판콜에이의 부작용 발생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서울 기온 39.6도

## 역대급 폭염에 붉게 물든 광화문

1907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을 일반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합성한 모습.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온도가 높을수록 붉게, 낮을수록 푸르게 표시된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 7월 수출 519억 달러... 월간 실적 '역대 2위'

## 산업부, 수출입 동향 발표

최근 산업생산과 설비투자 감소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만은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은 518억8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6.2% 증가하며 월간 실적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올해 수출은 1, 2월을 제외하고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1~7월 누적 수출도 역대 최고다. 수입은 488억8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16.2% 증가했다. 유가 상승으로 원유 수입이 증가했고, 국내 생산에 필요한 컴퓨터 기억장치와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수입이 줄었다. 무역흑자는 70억1000만 달러로

7개월 연속 흑자다.

1~7월 누적 수출은 6.4% 증가한 3491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1~7월 누적 일평균 수출도 22억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45.2%), 철강(34.0%), 반도체(31.6%), 석유화학(24.1%), 일반기계(18.5%), 컴퓨터(10.0%), 자동차부품(7.2%), 섬유(6.6%), 무선통신기기(4.0%), 디스플레이(2.4%) 등 10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